‘지역·대학 동반성장’ 광주 라이즈사업 17곳 선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광주시, 인재스킬업 사업 등 공모
총사업비 749억 14개 과제별 배분
창업 3만5000개·취업률 40% 목표
지역인재 취창업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과 대학이 공동성장하는 ‘광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 사업’에 대학 17곳이 선정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인재 스킬업(SKILL UP), 기업 밸류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대학 이노업(INNO UP) 프로젝트를 공모했으며, 지난 3일 광주라이즈위원회를 열어 14개 단위과제, 17개 대학((과제별로는 63개 대학)을 선정했다. 또 총 사업비 749억1000만원의 과제별 평가등급 배분방식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대학별로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10일)을 거쳐 최종 확정할방침이다.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5월초 광주라이즈사업 전담기관인 광주라이즈센터와 17개 대학의 협약을 체결, 라이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라이즈 사업을 통해 교육, 산업, 문화·복지·정주를 연계하는 라이즈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 산업의 △석·박사인력 1000명 배출 △창업기업 3만5000개 달성,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기업 또는 기관에 취업하는 △지역 정주 취업률 40%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인재 스킬업 프로젝트’는 3개 단위과제에 대해 13곳(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학)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혁신인재,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고교연계형 예비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VALUE UP) 프로젝트’는 3개 단위과제에 15곳이 선정됐다.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구현을 목표로, 광주 창업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광주일자리플랫폼과 연계해 지역인재의 지역 취업 지원을 위한 대학-지자체-기업간 취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역기업이 제품개발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실증스튜디오 구축·운영에 나선다.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프로젝트’는 4개 단위과제에 17곳이 선정됐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역문화예술·관광 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 모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역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이노업(INNO UP) 프로젝트’는 4개 단위과제를 18곳에서 수행한다. 대학시설공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대학 간 공유교육 체계구축, 직업평생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인재의 취·창업 및 지역 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사업 공모를 통해 17개 대학, 81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중앙과 지역의 학계·교육계, 경제·연구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검토, 대면 평가(발표와 질의응답), 종합 심의 등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했으며, 광주라이즈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 477명 배치

전남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194명을 포함한 477명을 9일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 인원은 238개 보건기관, 지방의료원 3개소, 취약지 병원 응급실 19개소, 병원선 2척 공립병원 등 14개소에 배치된다.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1차 의료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현재 전남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총 276개소 477명으로, 의과 179명, 치과 108명, 한의과 190명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는 50명, 한의과는 9명 증가했으나 치과 분야가 2명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57명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 감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장기 복무기간(36개월)에 비해 짧은 현역병(18개월) 선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교통공사, 역사 내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

광주 도시철도가 역사 내 무료 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개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영유아 동반 고객 이용률이 높은 5개 역사(남광주역, 문화전당역, 금남로4가역, 농성역, 운천역)에 총 6대의 유모차를 배치했다.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동반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금~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대여를 원하는 이용객은 고객안내센터를 방문, 신분증을 제시한 뒤 최대 5시간까지 사용 후 대여역으로 반납하면 된다.

공사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대여실적 등을 분석해 서비스 운영 역사를 확대하거나 유모차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북구 드론 활용 산불예방 건조한 날씨 속에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8일 광주 북구 생용동 산불감시초소에서 북구청 드론운영팀 직원들이 이동 드론지상관제차량에서 드론을 이용해 산불 예찰 활동을 실시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美 ‘태평염전 수입금지’ 신속 해제 주력

도 “과거 사건 기인…폭력·착취 없어”
근로여건 개선·인권조례 등 알리기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차단 조치에 대해 전남도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단일염전인 신안 태평염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천일염 제품에 대해 억류 및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인도보류 명령이 발동된 데 따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 조건, 임금 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 사업자)과 해당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관련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 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CBP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들의 올바른 노동환경을 정착하고 염전 환경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근로 여건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 매년 염전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과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000만원으로 확대해 실태조사 뿐 아니라 교육과 심층 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염전 운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640명을 교육했고 올해는 93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폭력·착취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인권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 6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해 도민인권 침해구제위원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또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전국 최다 선정

총 9개 시군 81개 읍면동 참여
민관협력…맞춤형 안전망 구축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분야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9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복지와 안전이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 재선정된 강진, 영암과 더불어 나주·영광·보성·무안·장흥·곡성·해남 등 7개 시군이 새롭게 선정돼 총 9개 시군, 81개 읍면동이 올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 규모로, 지역 여건에 따라 도농복합형, 안전취약계층 중심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도농복합형으로 선정된 나주시는 복지·보건·교육·문화·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합한 ‘나주형 복지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누구나 쉽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 8개 시군은 안전취약계층 중심형 모델로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운영한다.

영광은 누전차단 기능이 포함된 멀티탭을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해 화재 예방에 나서고, 보성은 장애물 감지기와 전등이 장착된 스마트 지팡이를 지원해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무안·해남·장흥은 야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내 리모컨형 LED 전등과 외부 태양광 LED 정원 등을 설치하고, 곡성은 구글 지도 기반의 스마트 안전지도를 개발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재선정된 강진과 영암은 각각 ‘AI 기반 1인 가구 통합관제 시스템’과 ‘돌봄 플러그’로 ICT 기반의 비대면 안전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참여 시군과 함께 읍면동 안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체와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생성형 챗봇 ‘AI 대변인’ 운영 ‘눈길’

챗GPT 기반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

광주시가 인공지능(AI)직원 1호 ‘AI 당지기’에 이은 2호 ‘AI 대변인’을 도입했다.

광주시는 직원 누구나 손쉽게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AI직원 제2호 ‘AI 대변인’을 도입·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AI 대변인’은 챗 지피티(Chat GPT)를 기반으로 광주시 보도자료 서식, 작성 기준, 표현 가이드를 반영해 핵심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안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담당부서 공무원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챗 지피티(Chat GPT) 기반 기술을 활용, 올해 자체 개발했다.

유형별 보도자료 서식을 갖춰 다양한 보도자료 작성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맞춤법 자동 수정 기능도 제공한다.

정상아 기자